

# 부담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요인 커

김득수 / 해태제과(주) 포장개발팀 차장

우리가 당연한 환경문제는 심각의 정도를 넘고 있다. 환경처가 최근 보이고 있는 환경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입법화라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적어도 그 접근방법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리라 본다.

환경처가 내놓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너무 의지가 앞서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우선 얼마전 과대포장 규제는 공간적 과대포장의 규제를 넘어 포장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그 안이 전혀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포장에 대한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서 업계의 큰 반발을 받고 그 안 자체가 법의 남용이란 인상만 주고 있다.

물류비, 재료비의 상승은 물론 마케팅 차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업이 과대포장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마찬

가지이다. 제과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담금 산정에 형평성이 없고 그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다.

우선 껌에 대한 부담금 문제다.

품목별로 구체적인 선정 사유나 기준이 설명되지 않고 법 제19조 1항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막연한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주무부처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껌이 부담금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껌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서 유해한 환경 조성과는 관계가 없다.

△ 껌은 광합성 작용에 의해 분해가 되므로 영구적으로 자연을 훼손시키는 유해한 품목이 아니다.

△ 껌은 과소비나 자원 낭비의 포장보다는 일본의 실험 결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치아운동' '운전중 기호품' '스트레스 해소' 등 인체에 유익한 면이 많은 저가 소량의 기호식품이다.

△ 단지 소비자들의 '공중도덕 불이행'으로 포장된 도로, 혹은 건물 바닥에 버려진 껌은 자국의 미관상 문제와 대중음식점 등에서 고객 서비스(입안 청결감)를 위해 제공되는 껌이 식 관습상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업계는 스스로 '깨끗한 거리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처리비용을 부과(가정에서 버려지는 것은 오물 수거료 등으로 각 가정에서 부담이 부과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음)하고자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비용 부담의 근거와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형평성과 접근 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 93년 4월의 갤럽조사 결과의 두 가지 표를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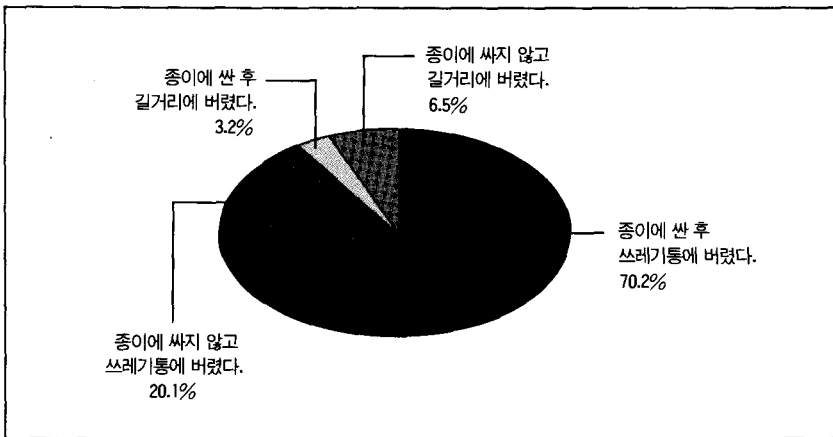
〈표1〉의 결과라면 매출의 6.5%에 대한 부담금만 물면 되는 것이다. 환경처가 문제삼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이다.

〈표2〉는 소비자 의식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는 법적 제재는 불과 8.2%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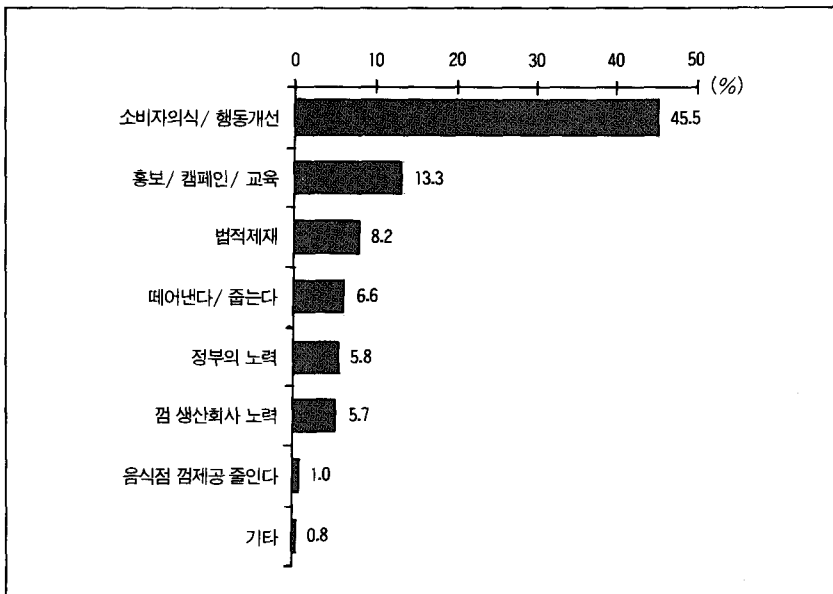
복합 용기에 대한 부담금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폐기물 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 기준의 10% 미만이어야 하고, 복합용기 소비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커피, 커피크림, 국산차 등은 왜 제외되는지 알 수가 없다. 타품목과의 부담액 책정의 불합리함을 표를 통해 보겠다.

부담금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

〈표 1〉 검 처리 방법



〈표 2〉 버려진 검으로 인한 거리 환경 오염의 해결책



〈표 3〉 각 품목에 대한 부담금 요율

구분	품목	단위	부담률	제품가격		규격		부담요율	
				소비자가	공장도가	용기중량	용적 (cm <sup>3</sup> )	공장도가%	錢 / cm <sup>3</sup>
유리병	순로선	개	3원	7,700	5,198	180g	353.2	0.06	0.85
	미스패남	개	2원	3,500	2,300	80g	416.9	0.08	0.48
합성수지용기	김치큰사발	개	50전	500	338	26g	335.6	0.15	0.15
기저귀	하기스	개	7원	970	655	50g	554.4	3.21	1.26
복합재료용기	목캔디	개	30원	1,000	675	68g	688.4	4.44	4.60
1회용면도기	도루코	개	20전	100	68	5g	13.7	0.29	1.45
1회용칫솔		개	20전	100	68	13g	12.1	0.29	1.65

담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물가 상승 말고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신경제 논리로 모든 공산품 가격을 억제시켜 놓고, 더군다나 시장개방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반대로 모순되는 환경처의 물가 인상 요인의 발상은 이해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몽을 통한 국민들의 의식개혁이다.

또한 국민들 스스로가 세 가지 네 가지를 분리해서 모아온 재활용 쓰레기가 다시 합쳐져서 난지도로 몽땅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여하튼 정부가 폐기물 관리기금 마련을 위해 부득이 재원조달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동참하기 위해 세전 이익률의 10% 범위내에서 부담금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